

광주 도심 곳곳 ‘땅속 지뢰’…미등록 매립쓰레기 ‘골치’

상무~첨단 도로공사서 수천톤 나와
중앙공원·제3근린공원 등 유사 사례
처리비용 수십억…공사 지연 초래
市 관리 누락 미등록 매립지 수도룩
“환경오염 등 우려…전수조사 절실”

광주광역시 상무지구~첨단산단간 도로
개설 공사 구간에서 수천톤의 매립(투
기)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사에 차
질이 우려된다. 해당 쓰레기는 1990년대
이전 광주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파묻
은 미등록 쓰레기매립장인 것으로 알려졌다.
2000년대 이후 도심 팽창에 따른 도
시기반 확충을 위한 크고작은 공사 과정
에서 매립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
사지연과 처리비용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
거리가 되고 있다.

19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
면, 상무지구~첨단산단 도로개설 공사 중
신창동 방향 영산강 교량 인근 제방 아래
에서 2000톤가량의 매립쓰레기가 쏟아져
나왔다. 해당 쓰레기는 1990년대 이전 도
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묻힌 미등록 매립
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.

현재 공사 현장에는 쓰레기 더미가 산
처럼 쌓여 있고, 광주시는 토사 분류와 수
거 작업을 통해 이달까지 1차 처리를 완료
한다는 계획이다. 그러나 교량과 연결되
는 진출입로까지 공사가 확대되면서 향후



광주 상무지구~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영산강 교량 건설 구간인 신창동 방향 제방 인근에서 수천톤의 매립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. 사진은 최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토사와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.

김양배 기자

추가 폐기물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
인다. 광주시는 이번 쓰레기 처리비용만
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 이
로 인해 공사도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
전망이다.

이 공사는 총사업비 2300억원 규모로
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.
국토교통부 총사업비 대상 사업으로 분류
돼 매립쓰레기 처리에 국비 지원이 가능

하지만, 일반 지자체나 민간 사업의 경우
전액 자체 부담해야 해 부담이 크다.

공사 감리를 맡은 장기운 책임기술인은
“이 일대가 과거 생활쓰레기를 묻은 매립
지였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다”
며 “공사구간 8000㎡ 내 매립쓰레기를 모
두 수거한 뒤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,
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”고 말했다.

이번 사례는 광주 도심 개발 과정에서

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. 지난
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
현장에서도 최대 6000톤에 이르는 생활·산
업 혼합 쓰레기가 무단으로 쏟아졌다. 이
쓰레기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됐지만 매립
주체 확인이 어려워, 처리 책임이 개발 시
행사로 돌아갔다.

또한 2018년 광주 북구 일곡청소년문
화외집 건립을 위해 제3근린공원 부지에

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도 14만
톤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드러난 바 있
다. 이는 1990년대 LH가 삼각산 쓰레기
매립장 폐기물을 인근으로 옮기면서 발생
한 것으로, 현재까지도 방치돼 있다.

건설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매립쓰레기
가 나올 경우 이를 ‘땅속 지뢰’로 부를 만
큼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.

업체 관계자는 “쓰레기 처리로 인한 공
사 지연과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 손
해를 감수하고라도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
많다”고 전했다.

문제는 이러한 불법 매립지가 도시 곁
곳에 흩어져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
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. 광주
시는 지난 2001년 전수조사를 통해 비위
생 매립지 35곳을 관리하고 있으나, 이번
상무~첨단 구간처럼 주민들은 알고 있던
매립지가 행정당국 조사에서는 누락된 사
례가 반복되고 있다.

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(서구3·더불어
민주당)은 “광주시가 파악한 35곳의 매립
지는 방산의 일각”이라며 “도심 팽창과 함
께 비위생 매립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
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시 발
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현지 주민들이 매립 사실을 알고
있는 만큼,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
해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오염 방지와 사
후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강
조했다. 김성수 기자 seongsu.kim@jnilbo.com

국민 1인당 15만~50만원 ‘소비쿠폰’ 받는다

새 정부 20조2천억 첫 추경 의결
李 대통령 “국가재정 사용할 때”

국민 1인당 15만~50만원씩 ‘민생회복
소비쿠폰’을 받는다.

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

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
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.

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
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
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의결
했다.

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, 이
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.

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. 세출
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. 세수결
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(10조3000억원)
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.

이 대통령은 “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
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
우 크다”며 “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
칙도 매우 중요하지만, 지금은 (경제 상
황이)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
필요할 때다.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
가 됐다”고 말했다.

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
동등하게 나눠주는 ‘보편지원’과 지원 금
액에 차이를 두는 ‘차등 지원’을 두고 이

견이 갈린 것에 대해선 “이번에는 두 가지
를 적절히 배합해서, 일부는 소득지원의
측면에서,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
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. 관련 부처
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시 것 같다”고 평가
했다.

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
에 제출할 예정이며, 7월 초 국회 본회의
통과를 기대하고 있다. ▶관련기사 3면

서울=김선욱 기자 seonwook.kim@jnilbo.com



제18회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힐링 라이딩 하세요!

영산강 자전거대행진

전남일보사는 광주·전남 시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과 함께
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게 될 ‘제18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’을
오는 6월 28일 개최합니다.

코스는 승촌보~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구간을 왕복합니다.

참가자는 자전거와 헬멧 등 개인 장비를 지참해야 하며, 참가비는 없습니다.
호남의 명품 자전거길을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일시	2025년 6월 28일 (토) 오전 9시 집결 (승촌보 영산강문화관)
구간	승촌보 문화관 뒤 광장 ~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(24Km)
신청기간	2025년 6월 5일 (목) ~ 6월 23일 (월)
인원	선착순 150명
주최 주관	全南日報 전일엔컬스
후원	전라남도
참가비	무료 (기념품 제공)
문의/신청	062-519-0730 (www.jnilbo.com)